

2022 예산안

현장 공감 예산 20선

포용적 경제회복·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목 차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1. 어린 사슴(소록)의 눈물을 닦아 주겠습니다. 1
2.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멈춰있던 제도에 온기를 불어넣다. 2
3. 한부모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4.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6
5. 낯은 수도관 안녕~ 수돗물, 이제는 안심돼요! 8
6.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을 위한
 '학습특별지원 바우처'를 새로 지원합니다. 10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7.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12
8. 우리 아이 발달, 골든타임을 지켜라! 14
9.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지원합니다! 15
10. 중증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책임지겠습니다. 17
11. 발달장애학생들의 걱정없고 안전한 통학을 지원합니다. 18
12. 말 못할 고민, 국가가 들어드립니다. 19

다양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13. 유기동물을 부탁해! 20
14. 대전현충원의 화병을 교체하여
 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22

15. 신속·안전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구급차 보강	23
16. 명작의 향연, 故이건희 컬렉션에 초대합니다!	24
17. 문화뉴딜의 허브, '아트컬처랩' 조성	25

신기술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18. AI기반 재난대응, 정부 어벤저스 출동!	26
19. 동네 배움터에서 어르신들도 쉽게 배우는 키오스크 교육	27
20. 소상공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쉽고 빠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8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 오상식 주무관, 044-215-7538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송형진 주무관, 061-840-0516

□ 예산 : ('21) 48억원 → ('22) 65억원 (+17억원, +35.5%)

□ 현장의 목소리

- 소록도병원·소록도 주민 거주 마을 현장방문을 통해 소록도 병원 운영 상황 및 소록도 주민 생활 여건 확인, 건의사항 청취*

* 일사: 2021. 5. 11. 13:30~15:30, 참석자: (기재부) 예산실장, 연금보건예산과장 등,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원장, 소록도 주민 15명 등

- 노후화된 치료·생활 시설 및 내용연수 도과한 의료장비를 다수 발견하는 등 열악한 치료·생활환경 개선 필요성 확인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사업내용) 한센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 투자확대

○ (개선방향)

- ① 병동 소방시설 강화 및 내진보강 공사를 통한 주민 안전강화

* 치료병동 보수 공사: 29억원(6,019㎡), 생활병동 개·보수 공사: 12억원(978㎡)

- ② 내용연수 도과 의료장비 교체를 통한 환자 치료환경 개선

* 노후 의료장비 교체: 6억원(8종×76백만원)

- ③ 소방·전기시설물 등 정기점검을 통한 주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안전시설 정기점검: 1억원(4개 시설×24백만원)

□ 의의 및 기대효과

- 소록도병원 기능보강 및 한센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멈춰있던 제도에 온기를 불어넣다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곽정환 주무관, 044-215-723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인철 사무관, 044-202-7484

□ 예산 : ('21) 31억원 → ('22) 26억원 (△5억원, △16.1%)

□ 현장의 목소리

-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21년) 되었으나, 소득요건 제출에 대한 부담으로 집행 저조*

* '21년 연말까지 수혜인원은 30%, 실집행률은 50% 미만이 될 전망

< 애로사항 발생 사례 >

- * 보호자가 발달장애, 고령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 → 서류준비 사실상 불가
- * 보호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다가구에 걸친 증빙 필요
- * 보호자가 건보료 면제자인 경우 → 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 보호자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직재시설, 복지시설 거주자) → 서류준비 가능하나, 해당시설 업무(수요조사, 가족에게 통지 등) 증가로 조력에 소극적

- 미신청인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공정한 지원을 위해 설정한 기준이 오히려 지원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

< 출퇴근비용 미신청 사유(명, %) >

구분	합계	대체이동수단· 기숙시설이용	코로나19 출근제한	중위소득 자격미달	중위소득 증빙어려움	기타
인원	7,201	3,296	122	772	2,119	892
비율	100	45.8	1.7	10.7	29.4	12.4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사업내용)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에게 출퇴근 비용(월 5만원) 지원

*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최저임금 미만 보수를 받는 장애인

- (개선방향) 중위소득 100% 미만 요건 삭제

□ 의의 및 기대효과

- 취약계층인 최종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지원
-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 대책에서 발표된 추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저변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

<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21.3월) 中 >

□ 장애인 근로자 근로생활 지원

- (출퇴근 비용 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하여 출퇴근 비용 지원

- '21~'22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세부 추진방안 마련('23~)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이미숙 사무관, 044-215-751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탁상우 사무관, 02-2100-6351

□ 예산 : ('21) 3,067억원 → ('22) 4,226억원 (+1,159억원, +37.8%)

□ 현장의 목소리 (한부모가족 간담회(7.28))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낳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보려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단기알바를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아기를 학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를 구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52%입니다. 아이와 둘이 사는 한부모 가족은 월 160만원 이상 벌면 한부모 자녀양육비를 못받게 됩니다. 게다가 다른 복지제도와는 달리 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부모 자녀 양육비를 받으려면 160만원 이상은 벌지 말라는 건데... 적어도 일을 할 유인을 없애지는 말아주세요.”

①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기술부족 등으로 단기 알바와 같이 일시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밖에 없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

○ 특히, 원가정과 분리된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양육, 가사 등의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아동방임·학대·유기로 이어질 수 있음

⇒ '학업 유지, 돌봄(양육)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

② (자녀양육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자녀 1인)이 최저임금을 받게되면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함

* 수급기준: 월 1,605,801원 이하(2인기준), 최저임금: 월 1,822,480원
161~180만원 구간에 있는 한부모는 일을 '덜' 하는 것이 이익

○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되는 시점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소득액이 급감*해 청소년 한부모는 근로 의지 상실

* 2인 최대 월 305만원 → 월 161만원

⇒ 양육비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중위소득 52%이하) 산정시 소득공제 적용 요구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①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13억원)

* 상담지원 → 전문심리치료 → 의료(출산) → 양육(돌봄) → 검정고시 등 → 직업훈련 → 취업지원’으로 연계되는 패키지 프로그램

- ②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선정시 근로·사업 소득 공제 도입(+264억원)

* 기준소득액(2인기준, 최대): (공제前) 1,605,801원 → (공제後) 2,294,001원

□ 의의 및 기대효과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유지, 직업교육 및 취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할 동기를 부여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이미숙 사무관, 044-215-751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박상민 사무관, 02-2100-6374

□ 예산 : ('22) 37억원 (신규)

□ 현장의 목소리

"자녀가 어릴 때 나의 한국어 실력이 서툴러 알림장 읽어주기, 숙제 지도 등 기본적인 학습 지도를 해줄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

나는 괜찮지만 내 자녀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구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사람으로 잘 적응해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이주여성, 7.28)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교사가 찾아 지역 다문화 가족센터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6.21)

○ 다문화가족 자녀는 학교폭력, 왕따 등 정서적 우울감이 심각
하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다문화가족 실태조사('18년))

* 학교폭력 경험비율이 8.2%(3년전 대비 3.2%p증가)에 이르고 공부(37.4%), 외모(26.7%), 진로(25.3%) 등의 고민이 있으나,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15.3%에 이릅니다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최근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주요 지원 내용이
육아 → 취학전·후, 학령기 자녀의 성장 지원으로 변화될 필요

[다문화가족 자녀 수 증가 추이]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연령별 맞춤 서비스 제공(+37억원)

- ▶ **(취학 前)** 유치원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다문화가정으로 방문해 미취학 자녀의 취학준비 학습(읽기, 쓰기, 셈하기 등) 지도
- ▶ **(취학 後)** 연 4회 입시·취업상담사가 각 지역센터로 방문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입시, 진로 컨설팅
- ▶ **(全연령대)** 각 지역 센터에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왕따, 가정불화 등 심리적 우울감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심리 상담 제공

□ 의의 및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연령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이선호 사무관, 044-215-723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이정현 사무관, 044-201-7125

□ 예산 : ('22) 39.1억 원 (신규)

□ 현장의 목소리

“옥내급수관 노후화가 심각해서 개보수가 필요하고 수돗물이 공공재인 만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00대학교 환경관련 학과 교수, 60대)

“녹슨 관을 지나면서 오염된 수돗물이 우려스러워 관 교체 비용을 알아봤는데, 우리집 형편에 교체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서울 금천구 주부 50대)

① (현황) 수도관을 20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부식과 누수가 발생하고 녹물이 나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 발생

②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가정 내 급수관이 노후되면 다시 녹물이 발생되어 수돗물 신뢰도 저하 및 국민 건강 우려

* 수돗물을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 문제'가 41.7%
 ('17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③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에 대한 공감대는 높은 수준이며, 비용 지원시 교체하겠다는 의견이 60% 차지

* 교체 의견(89%), 비용지원 시 교체(59%) (대전 고객만족도 조사('17), 응답자 509명)

④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선사업'에 대한 도민 만족도는 89%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매우만족 84%, 만족 5%, 불만족 4% (경기연구원 조사('15), 총 2,611세대)

→ 노후된 급수관을 교체해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 多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비용 지원으로 조속히 노후관을 개량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국민 건강 보호

- 노후관 개선을 통해 깨끗하게 정수된 수돗물을 그대로 공급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식성이 강한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 사용 세대 우선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45~60% 구간 취약계층

※ (참고) 중위소득 45%이하는 국토부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지원 중

- 2년간 총 8,747세대 지원

* (광역단체) 5,509세대(국고 35.95억원 지원), (기초단체) 3,238세대(국고 42.25억원 지원)

○ 개선비용 중 자부담을 5%(세대당 약 12.5만원 부담)*로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활성화 도모

* 관련연구 설문조사 결과 교체공사비 지원 시 수요자의 자부담 지불의사액은 15만원 내외로 국고지원을 통한 부담완화 필요

□ 의의 및 기대효과

○ 녹슨 노후 급수관 교체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낭비되는 수돗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

* 96,620gCO₂/m³의 탄소 발생량 저감

- 인천시 적수사고(19)와 같은 수질사고 예방으로 사회적 기회비용 발생 최소화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을 위한 ‘학습특별지원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 송기선 사무관, 044-215-7252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신동진 사무관, 044-203-6946

☐ 예산 : ('22) 101억원(신규)

☐ 현장의 목소리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들 간 학업수준 격차가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교육급여나 국민재난지원금을 지원받더라도 경제여건상 실제 자녀 교육비로 쓰여지지 않는 못하거든요.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20대)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학습결손으로 인해 학생 간 학업수준 격차 심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도 가중

* '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주요과목(국영수) 기초학력미달 비율 증가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생에게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

* '22년 지원액(연간) :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학습교재 구매, EBS 유료콘텐츠 등 교육비로 사용가능한 바우처 10만원을 신규 지급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22년 30.6만명)

－ 기초생활보장 목적의 교육급여 단가 인상(+21.1%)과 함께, 현금지급 방식의 한계를 바우처로 보완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사업 개요>

- **(개요)** 교육급여 수급자(약 30.6만명)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교육목적 포인트 한시 지원(既보유 신용·체크카드 활용)
- **(내용)** 학습목적 교재 구매 + EBS 유료콘텐츠(중학프리미엄, 어학, 직업탐구 등)
- **(사업규모)** '22년 총 101억원* ※ 국고 30% 지원

□ **의의 및 기대효과**

- 국가와 교육청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간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

* '한국판 뉴딜 2.0'(격차해소), '교육회복 프로젝트'(교육부)의 취지 구현

- 바우처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습 목적의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대폭 증가*

* 평균단가 인상폭: (교육급여) 21.1%→ (교육급여+바우처) 48.7%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이동석 사무관 044-215-7512
 복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0

□ 예산 : ('21) 727억원 → ('22) 1,024억원 (+297억원, +40.9%)

□ 현장의 목소리

※ 간담회, 현장방문 및 종사자 면담 등 현장의 목소리 수렴

① 간담회 및 현장방문

* ①제2차관 취약아동 보호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4.15), ②복지예산과 현장방문(서울 강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4.30) ③예산실장 아동학대 대응투자방향 마련 현장간담회(8.4)

② 업계 종사자 면담

* 요보호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면담

① (아동학대 대응 재정지원체계 정비)

- 복지부 일반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과 복권기금(기재부)에서 분절적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정지원 창구 일원화 요구
(취약아동 보호 간담회, 4.15)

② (보호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확충 및 노후 시설 기능보강 요구
(강선우 의원실, 4.30)

③ (피해아동 치유·회복지원 강화) 피해아동 심리치료 확대, 거점 전담의료기관 지정, 거점아보전 심리치료 전담팀 운영* 등
(아동학대 대응투자방향 마련 현장 간담회, 4.15)

* 인건비가 낮아 '21.7.29 기준 51명(17개소×3명) 중 10명(팀장 2, 팀원8명)만 채용 완료

④ (아동학대 대응인력 업무여건 개선) 그룹홈 개소당 인력 충원*, 녹취록 작성 장비**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투자방향 마련 현장 간담회, 4.15 / 업계 종사자 면담 등)

* 3명 24시간 교대 근무로 업무 부담이 크며,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6명(시설장 1, 보육사 4, 심리치료사 1)이 종사하고 있음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시간의 40% 이상을 현장조사 녹취 전산화에 사용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 ① **(아동학대 대응 재정지원체계 정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던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재정지원창구 일원화

* (범피기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21)287 → ('22안)381억원
(복권기금)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 ('21)267 → ('22안)394억원

⇒ 재정지원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 ② **(보호인프라 확충) 신규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

- (신규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14개소(81→95), 학대피해 아동쉼터 35개소(105→140), 그룹홈 12개소(505→517) 확충

* '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수준으로 확대 추진

- (개보수) 준공 15년이 경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각 10개소 기능보강 실시 ⇒ 학대피해아동 보호강화

- ③ **(피해아동 치유·회복지원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사업비 상향(27 → 46백만원/年), 심리치료 제공 아동 수를 2,000 → 4,750명으로 대폭 확대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담인력 인건비 현실화 (39,000 → 46,500천원) ⇒ 심리치료센터 운영 활성화
- 방문형 가족회복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설, 사례관리 (1,000가정) 실시 ⇒ 학대 유발 요인 제거 및 재학대 방지
- 8개 시도별 1개의 거점전담의료기관 지정, 운영비 지원 ⇒ 지역 내 교육자문 제공 및 지역의료기관 회복치료 연계

- ④ **(아동학대 대응인력 업무여건 개선)**

- 그룹홈 개소당 인원 1명 충원(+172명)
⇒ 종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아동 보호 강화 기대
-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조사 전담팀에 이동형 녹취록 작성장비 1대 지원 ⇒ 학대조사 업무효율화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 박혜강 사무관, 044-215-753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노정엽 주무관, 044-202-2827

□ 예산 : ('21) 8억원 → ('22) 8억원

□ 현장의 목소리

- 최근 산모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한 양육지식 부족으로 인해 선천적·후천적 영유아 발달 장애가 증가하는 추세

* '20년 발달장애인은 24.8만명으로 전체 장애인(263만명)의 9.4% 수준이며, 전체 장애인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연평균 증가율 3.3%)

[발달장애란?]

-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아닌,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언어), 인지 발달의 지연과 이상**을 특징으로 하고, **제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를 모두 지칭
- 발달 수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으나 **정밀한 관찰 필요**
(관찰 증상 예시) 감정표현 불안정, 간지럼, 소리 등 특정 자극에 대해 과민 반응, 또래와 달리 놀이기구나 구기 종목 등을 즐기지 못함.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주 울며 근력이 떨어지고 감각 인지가 어려움, 새로운 음식에 대한 예민한 반응 등

-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고 돌봄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일수록 장애 발생률이 높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사업내용) 영유아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권고된 저소득층(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진료비 지원
- (개선방향) ①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②정밀검사의 필요성 및 후속사업(치료지원) 홍보 활동 확대
- 건강보험 하위 70%(기준중위소득 130% 수준)까지 정밀검사 비용 (20~40만원)을 지원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계

□ 기대효과

-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골든 타임) 및 치료 사업으로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발달장애는 조기 발견과 아이가 사회에 적응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자존감 손상, 정서적 어려움, 가족 전체의 고립감 등 문제 발생 우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이동석 사무관, 044-215-7512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단비 사무관, 044-202-3443

□ 예산 : ('21) 515억원 → ('22) 916억원 (+401억원, +77.9%)

□ 현장의 목소리

※ **현장방문, 종합대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 수렴

① **현장방문** : 서울 자립지원전담기관(4.30), 세종시 아동양육시설(6.3)

②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강화방안(7.13)** : 범부처 TF 회의 수 차례 진행

①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LH공공임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생계나 주거안정 유지에 부족

⇒ 이에 아동자산형성지원, 자립수당 지급기간·금액*,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월세+사례관리비)** 확대 요구 (범부처 TF회의)

* (지급기간) 보호종료 3 → 5년 이내, (지급금액) 30 → 50만원/월

** 10개 시도 377명 → 17개 시도 647명

② 보호종료아동은 심리·정서적 상태가 취약하나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 ⇒ 자립지원 기관 신설 요구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① **(경제적 지원 확대)** 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기간 확대 및 ②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비율 상향조정

- (자립수당)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기간을 現 보호종료 3년 이내 → 5년 이내로 확대

*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이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인 점을 감안

▪ (소요) '21년 220억 → '22년 275억(+23.5%)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급대상(명)	8,000	9,982	11,824	12,283	12,386
지급금액(억원)	220	275	325	337	340

-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액을 적립 시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비율을 現 1:1 → 1:2로 확대

- (소요) '21년 250억 → '22년 554억(+121.4%)

⇒ 평균 적립금 447만원('20년)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 기대

② (후견기관 신설) 자립지원 전담기관 구축·운영 (신규)

- 17개 시도에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자립지원 전담 요원(총 120명) 배치

- 기관당 사업비 2억원 편성, 대상 아동의 상황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주거비, 취업지원 등) 추진

※ 요보호아동자립지원 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폐지, 전담기관으로 사례관리 일원화

- (소요) 인건비, 사업비 등 64억원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후견 및 지원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김다현 사무관, 044-215-7514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안진모 사무관, 044-202-3350

□ 예산 : ('21) 216억원 → ('22) 484억원 (+268억원, +124.1%)

□ 현장의 목소리

"5월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소득기준이 초과되어 서비스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하네요. 저의 딸은 나이가 어려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중증장애아동은 베이비시터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라 양육지원이 정말 급한데 돈이 들더라도 장애아동전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서울, 만 4세, 뇌병변·언어 중복장애 어머니)

- 경증 장애아의 경우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로 연 최대 840시간, 소득기준 제한 없이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 반면, "중증" 장애아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연 720시간 한도 돌봄 서비스 제공('21)
- ⇒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중증 장애아 가정은 정부 제공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지원시간) 경증 장애아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여가부) 수준으로 중증 장애아 이용시간 확대(연 720→840시간)
- (소득기준) 자부담(40%)을 설계해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의의 및 기대효과

- 중증 장애아 가족 양육부담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곽정환 주무관, 044-215-723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황은진 사무관, 044-202-7485

□ 예산 : ('22) 2.7억 원 (신규)

□ 현장의 목소리

< 발달센터 의견청취 내용('21.5월) >

* 학생들이 혼자서 버스나 지하철, 또는 택시를 타는 것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해서 부모님과 함께 발달센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발달센터 관계자)

○ 발달장애인의 직업체험 및 훈련을 위해 지난 4년간('16~'20) 전국 17개 시·도에 훈련센터를 건립

○ 대부분의 센터가 도심지에 설립되었으나, 관할 지역이 광역 시·도 단위로 넓어 원거리 거주 장애인은 훈련 참여가 어려움*

* 원거리 통학의 부담과 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통학버스 지원

* 대구(청도,칠곡,고령), 광주(곡성,구례,담양), 경기북부(파주,포천,가평) 등 9개 센터

- (재정소요) 270백만원 = 9개소 x 3백만원(25인승 버스 임차료) x 10월

□ 의의 및 기대효과

○ 장애인의 원거리통학 및 안전사고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여 관할지역 내 폭넓은 훈련기회를 제공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이미숙 사무관, 044-215-7513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나태준 사무관, 02-2100-6232

□ 예산 : ('21) 72억원 → ('22) 81억원 (+9억원, +12.5%)

□ 현장의 목소리

○ '16년도 신발깎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음

* 기초생보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자 중 만 11~18세 여성청소년

○ 그러나, 지원대상이 만 11세~ 18세로 한정되어 만 10세 이하 청소년은 초경을 시작했더라도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초경 연령이 점차 빨리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만 9세부터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조정

* 지원대상: ('21) 114천명 → ('22년) 123.3천명

지원단가: ('21) 128천원 → ('22년) 144천원

소요예산: ('21) 7,182백만원 → ('22년) 8,056백만원

○ 또래보다 초경이 빠른 만 9세~10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감 및 경제적 부담 해소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최항 주무관, 044-215-7356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현숙 주무관, 044-201-2374

□ 예산 : ('21) 53억원 → ('22)113억원 (+60억원, +113%)

□ 현장의 목소리

“유기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결국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게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을 강화하고 중성화 수술을 통해 무분별한 번식을 막아야 합니다.”

“유기동물 관리는 동물유기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 보호센터의 환경개선과 유기동물의 생존권 보호, 입양 활성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지자체 등)

① (현황) 유실·유기동물의 지속 증가로 구조·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② 반려동물 양육가구수 증가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지원 확대 요구

※ 길고양이 관련 문제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등

③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및 보호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

* 유실유기동물 수 : ('17) 102천마리 → ('18) 121 → ('19) 135 → ('20) 130

④ 의도치 않은 번식 반복 또는 유실·유기된 후 야생화 되어 사람·가축의 피해 및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 초래

* △“닭들 다 죽여놓고, 아유”...농가 쉼대밭 만든 들개떼(SBS, '21.5.6)

△가축 죽이고 사람까지...들개가 된 유기견의 습격(동아일보, '21.5.27)

→ 기존 입양 활성화 정책에 더하여 **유실·유기동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 多

□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 (사업내용)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 및 보호여건 개선을 통한 동물보호·복지 실현

① (사전지원) 읍면단위 마당개·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확대

(지원1) 읍면단위 마당개 중성화수술지원('22^{신규}) : 15억원^{18천마리}

(지원2)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확대 : ('21) 11.4억원^{38천마리} → ('22) 34.2억원^{86천마리}

② (사후관리) 구조·보호 및 관리 환경 개선과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지원1)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지원 : ('21) 6.5억원^{31천마리} → ('22) 8.4억원^{40천마리}

(지원2)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21) 6.6억원^{8,826마리} → ('22) 7.5억원^{9,986마리}

(지원3)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지원 : ('22^{신규}) 15억원^{15개소}

- (지원효과) ①유기동물 개체수 감소에 따른 피해 절감과
②대국민 인식개선, ③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① (피해예방)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유기견·유기묘 개체수 감소를 통해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갈등(소음 등) 피해 예방 및 감소 효과

② (인식개선)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③ (사회적 비용 감소)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동물보호 시설 내 관리 동물 축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시설관리비 등) 절감 및 관리 여건 개선으로 동물복지 수준 향상

대전현충원의 화병을 교체하여 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 송준식 사무관, 044-215-7253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박남희 사무관, 042-820-7050

□ 예산 : ('22) 7억원(신규)

□ 현장의 목소리

- 대전현충원 화병은 플라스틱 재질로 품격이 떨어지고, 화병의 조화가 강풍에 날아가는 등 묘역관리에 어려움
- 서울현충원은 석재화병으로 교체를 완료하였으나, 대전현충원은 플라스틱화병을 사용하여 안장자간 예우 차이 발생

구분	대전현충원	서울현충원
화병 및 조화		
묘역 전경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기존 플라스틱 화병 약 10만개를 `26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2만개씩 교체 추진

* 대전현충원 화병교체 ('22^{신규}) : 7억원^{20,000개}

□ 의의 및 기대효과

- 국립묘지의 위상제고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김민정 사무관, 044-215-7432

소방청 119구급과, 조우혁 주무관, 044-205-7439

□ 예산 : ('22년) 63억원(신규)

□ 현장의 목소리

- 코로나19 발생 이후 119구급대에서 일평균 약 500명*의 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나, 전국 소방서(226개) 중 음압구급차를 보유한 소방서는 20곳에 불과

* ('20.1.3~'21.7.31) 총 29만명의 확진·의심환자 이송

- 일반구급차로 이송할 경우 비닐로 내부보호막을 설치하나, 설치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신속·안전한 출동에 한계
- 구급차 內 이송환자와 구급대원의 2차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음압구급차 보강 필요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신속한 이송 및 체계적 감염관리를 위한 음압구급차 보강
 - 인접한 2개 소방관서당 1대 배치로, 효율적인 출동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22년 음압구급차 55대* 보강 추진

* (총 104대) '22년 55대(6,325백만원), '23년 49대(5,635백만원)

□ 의의 및 기대효과

- 감염병 대응 응급이송서비스 개선으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구조대원의 감염방지에도 기여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권동한 주무관, 044-215-727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정명희 연구관, 02-2077-939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이추영 연구관, 02-3701-9572

□ 예산 : ('22년) 58억원(신규)

□ 현장의 목소리

- 다수의 국보급 기증품*을 포함한 故이건희 컬렉션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DB 구축 등 필요

* 국보 제216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 포함 약 11,023건

- 기증품의 중요성, 역사적 가치에 걸맞는 명품전시회 추진 및 기증된 문화재·미술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기증품 관리를 위한 등록·연구비용 및 시설개선 등 : +33억원
 - 기증품 11,023건*의 등록 및 DB구축,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인력채용, 장비구입, 연구용역 등 추가 지원

* 국립중앙박물관 9,797건, 국립현대미술관 1,226건

** 기증품 규모가 방대하여 '26년까지 DB구축 및 기초조사가 진행될 계획

- 대국민 공개 전시 및 지역 특별전 : +25억원
 - 일반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금년 특별공개전(21.7월~)에 이어 '22년 연합 특별전 및 미술품 특별전, 지역 특별전* 추진

*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지방 공공 미술관 공동 기획전 및 지방박물관 특별전 (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특별전 2회, 청주관 특별전시 1회

□ 의의 및 기대효과

- 개인의 기증품이 국민의 문화향유 자산이 되고, 이를 적극 전시함으로써 향후 기부문화 확산 및 문화향유권 확대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신경아 사무관, 044-215-727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승진 서기관, 044-203-2712

□ 예산 : ('22) 160억 원(신규)

□ 현장의 목소리

- 예술의 창제작, 교육, 창업 등 지원사업이 개별·분절·단기적으로 이루어져 예술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한계
-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형태의 창작시도가 나타나는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 장르와 장르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필요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예술특화 One-Stop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분야의 새로운 활로 모색
 - ①창·제작, ②교류·교육, ③시연·유통, ④창업·창직 등 예술산업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
 - * 예술의 특성에 맞게 창제작 공간을 지원하고, 지원사업(교육, 창업 등) 매칭
- 서울 내 1개소 조성 비용(임차료 및 리모델링, 장비구입비 등) 지원

□ 의의 및 기대효과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외 예술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예술현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예술분야의 새로운 활로 모색 및 문화뉴딜의 허브로 활용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 김병철 사무관, 044-215-73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리털인재양성팀, 이은규 사무관, 044-202-6371

□ 예산 : ('22) 32억 원(신규)

□ 현장의 목소리

- 소나무 재선충 발생 지역 및 산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과적 산림해충 대응 필요(관계기관 간담회)

* 재선충 발생지역(기초지자체) : ('19년) 7개 → ('20년) 12개

** '18년도 소나무 69만본에 재선충이 발생하여 340억원 이상 방제비용 소요

- 화학폭발·누출 등 대형사고가 지속 발생중이나(최근 5년간 21개 공단 145건) 피해 확산 예측 지연 등으로 초동 대응에 어려움

* 화학물질 종류, 사고유형(폭발, 화재, 누출), 기상 환경에 따라 맞춤형 대응이 필요

□ 사업내용 : 부처협업 통해 인공지능 개발·실증 2개 과제 신설

- (산림청) AI기반 산림해충 발생 현황 및 확산 경로 분석·예측 실증 (18억원)

- (소방청) 화학재난사고 피해확산 분석·시각화 및 대응 솔루션 실증 (14억원)

□ 의의 및 기대효과

- 산림해충 방제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50%줄일 경우, CO2 발생량 2,500톤(승용차 1천대 분량) 감축 가능
- 화학 재난 예측·신속대응을 통해 50% 피해 절감 효과를 달성할 경우 재산피해(연 26.9억원), 사상자(41명) 감소 예상

동네 배움터에서 어르신들도 쉽게 배우는 키오스크 교육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 김병철 사무관, 044-215-73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황선영 사무관, 044-202-6152

□ 예산 : ('21) 757억원 → ('22) 773억원 (+16억원, +2.2%)

□ 현장의 목소리

- 보다 다양한 연령·계층이 디지털 교육 혜택을 누릴 필요
-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익숙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키오스크 다루는 법을 학습할 필요

* “키오스크 못 다뤄서 20분 해맨 엄마, 결국 우셨다”(21.3.12, 서울신문)

□ 사업내용 : 디지털 배움터(전국 1,000여개 주민센터, 경로당 등)

- 기초지자체별 대표 디지털배움터에 교육용 키오스크*를 임대·배치하여 반복 학습을 통한 디지털 역량 향상 추진

* 교통, 음식, 커피, 행정 등 다양한 상황별 SW가 탑재된 키오스크

* (22년 신규) 226대 × 2백만원 = 452백만원

- 일과시간에 교육이 어려운 소상공인, 직장인 등도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주말반 확대 운영

* (20년) 전체 교육과정의 28%(7만 9천명) 운영 → (22년)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전체 교육과정의 40% 수준으로 확대 추진

□ 의의 및 기대효과

- 연령·계층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실생활에 가까운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

소상공인이 비대면 · 온라인으로 쉽고 빠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이상희 사무관, 044-215-731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송제훈 서기관, 044-204-7823

□ 예산 : ('21) 2억원 → ('22) 55억원(+53억원)

□ 현장의 목소리

“작년 2월에 코로나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 세무서 등 이곳저곳 방문하여 서류요청하고, 팩스로 받는 등 구비서류 준비과정도 힘들었는데, 이후에도 공단 방문하여 대출신청하고,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받은 후 보증기관 방문, 보증서 발급 후 은행방문하여 대출금을 받기까지 여러 차례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게문 닫고 직접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지역 음식점 운영 소상공인, 40대)

○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대출과정에서 2회 이상 오프라인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평균 방문 건수: (직접대출) 소진공 2회 방문,
(대리대출) 시중은행 4회 방문

□ 사업내용 및 개선방향

○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지원을 위한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22~'23년)

- 온라인 대출상담 기능을 지원하고, 대출금 약정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

□ 의의 및 기대효과

○ 잦은 오프라인 창구 방문을 줄이는 등 대출 과정의 불편을 경감하여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온전히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